

전자정부(e-Government) 컨퍼런스 2003

한국 전자정부의 나아갈 방향

2003. 6. 13

이 상 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자정부, 선택이 아닌 필수!

- ❖ 국가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스템 마련하는 정부
- ❖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부
- ❖ 수많은 안전사고, 경제참사의 예방시스템 마련하는 정부
- ❖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생체형 국가운영시스템 으로서의 정부

현 정부시스템의 문제점

- ❖ 역대정부의 최대 비극, “친인척 비리 및 부정 부패”
- ❖ 비전문가의 행정관리, “창의적 시스템 부재”
- ❖ 부처간 이기주의, 중복된 사업, “정부의 비효율성 팽배”
- ❖ 정부의 투명성, 부패지수 OCED 회원국 중 최하위

선진국 추진사례 (1)

❖ 미국

- 1993년부터 대통령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전자정부 구축을 뒷받침

ex) 정부성과결과법, 문서업무감축법, 전자적정보자유법, 정보관리기술개혁법
정부문서업무제거법 등 다양한 법률안을 제정

❖ 영국

- 정부주도하의 '민주 기능성 전자정부' 구축사업 추진
- MS사와 공동으로 전자정부 모델 판촉활동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선진국 추진사례 (2)

❖ 아일랜드

- 민간과 정부, 행정과 비즈니스의 벽을 없앤 ‘국가 경영형 전자정부’ 구축
- 세계 굴지 IT기업들의 e-비즈니스 천국

❖ 싱가포르

- 국가체제의 전자국가 조직화와 기능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ONE(One Network for Everyone)’ 추진
- 기업경영시스템 PS21 (Public Service for 21st Century) 채택, 공무원 인사의 유연성과 전문성 확보

생체형 전자정부 구현

- ❖ 인체는 각 기관이 독립적이면서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완벽한 생명유지 구조 구축

인체	국가	기능	역할
두뇌 (대뇌, 소뇌, 간뇌)	입법·사법·행정부	독립기능	기획과 종합, 견제와 균형
5장 6부	지방자치제, 감사기관, 집행부처	집행기능	상호유기적 조화와 집행
신경망 및 혈액	사회기간망과 금융, 국방과 경찰	인프라기능, 면역, 보호	피드백을 통한 수요공급의 조절, 외부환경에 대한 자율적 대처 ⁶

21세기 전자정부를 위한 과제

- ❖ “전자정부기본법” 제정
- ❖ 정부내 “기업경영형 인사시스템” 마련
- ❖ IT기업의 공공시장 창출방안 마련
- ❖ 국회내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